

통합물관리 시대, 중장기 가뭄대책 논의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가뭄 빈도 심화됨에 따라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제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이후 가뭄대책 전략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전북도의 협력 아래 개최하게 됐다.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절감, 도서지역 비상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생·공용수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물공급 체계조정, 비상연계 및 보 활용, 수요관리제도 개선, 신규수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가뭄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며, 홍수-가뭄위험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지자체 가뭄 해소를 위해 고시된 범위의 시설간 비상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과장(물이용기획과), △K-water 이영목 차장(영·섬유역분부), △박영기 교수(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교수(동산대), △김택전 이사장((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은 광주·전남의 근원적 가뭄해결을 위해 지

난 월 마련한 영상강·심진강구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물공급체계 조정, 대체수자원 확보, 비상연계, 수요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수량 수질 수생태계가 균형있게 관리되는 통합 물관리를 주장하며,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시 유역 간 비상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전북도 물포럼 대표인 강동희 교수는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시 충분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더불어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급수연결망 투자 및 가뭄 시 지자체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승식 도의원은 "섬진강댐은 정음권에 생활용수(6만톤/일)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개시 농업용수 방류가 많아 집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음권 생활용수 가뭄대

책으로 전주권 광역(용담댐) 및 부안댐 광역에서 대체 공급(3.0천m³/일)중이나 섬진강 광역(정음권) 생활용수 수요량의 약 5.7%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 가뭄대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회, 정부, 관계기관, 각계 전문가가 모두 자리한 이 토론회를 통해 가뭄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상호협조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최근 강우에도 불구하고 22.4%(5.22일 기준)로 예년에 비해 약 64.8%에 불과한 상태다. 전라북도의 최대 수원인 용담댐 또한 저수율이 33.4%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관개기에 접어들면서 생·공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김재훈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이해력 향상 시민단체와 소통의 장 마련

도, 익산참여연대 등 14개 단체와 연대협력 간담회

전북도는 내년에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3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익산참여연대 등 14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128년만에 명칭이 변경되고, 전반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

이에 도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에 발맞춰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비롯해 의회·교육청 협력 활동, 민간

중심 학술대회 등 설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전북의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물론, 연대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협력할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도는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지 결집이 중요하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등 주

요분야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체계에 맞춰 100여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으며, 2040년 미래상으로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 10%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민선5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7개월의 기간 동안 특별법이 전북의 밝은 미래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 끝에 부결

289표 중 찬성 178 · 반대 107 · 무효 4...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 끝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자문위 회부

"빠른 시일 내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조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

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당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부연했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뉴시스

총선공약·국책사업 발굴...도, 시군과 머리 맞대

기획부서장 회의 열고 시군별 1차 발굴 188건 사업 설명

전북도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과 전북도 혁신 발전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30일 전북연구원에서 '제22대 총선공약·국책사업 발굴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14개 시군 기획부서장,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군별로 1차 발굴한 188건의 사업설명과 총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논의했다. /김재훈기자

특히, 전북도는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공약사업과 2025년 이후 추진할 국책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혁신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도는 전북연구원 및 14개 시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과 △신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동부권·새만금, △안전·환경, △복지·교육 등 6개 분야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약 및 국책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발굴과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구체화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총선 공약 및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